

소재·부품·장비  
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② (공개)

---

# 소재 · 부품 · 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(26-30년)

---

2025. 10. 23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[ 요약 ]

### 1. 추진 배경

#### □ 소부장 클러스터화 촉진을 위해 '21년부터 총 10개의 단지 지정

- 기술과 생산기지,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특화단지 지정\*
  - \* 1기 : 반도체(용인), 이차전지(청주), 디스플레이(천안), 정밀기계(창원), 탄소소재(전주)
  - \*\* 2기 : 반도체장비(안성), 전력반도체(부산), 바이오소부장(오송), 모빌리티모터(대구), 자율주행(광주)
- 업종, 단지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방안\* 마련·시행
  - \* R&D, 규제 특례, 인력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 8,000억 규모 지원방안 마련

#### □ 특화단지 지정·육성에 따른 산업·경제·지역적 성과 창출

- (경제) 1기 특화단지 지정('21년) 이후 총 11조 민간투자 집행
  - \* 기업 투자액('20→'24, 조원): (이차전지) 4.9, (디스플레이) 2.7 (반도체) 2
- (산업) 소부장 자립,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5개 핵심기술 확보 중
  - \* 반도체 원자층 증착 장비 등 핵심전략기술 8건, 공급망안정품목 7건 확보 중
- (지역) 입주기업 713개사 증가, 8천명 추가고용(1기 기준)
  - \* 고용 증가('20→'24, 명) : (이차전지) 3,342 (디스플레이) 3,018, (탄소소재) 932

⇒ 기존 특화단지 성과에 기반하여 업종·지역 확대 요구가 증대

#### □ 구조적 한계 개선, 특화단지 고도화를 뒷받침할 추진 전략 요구

- 사업 위주의 접근으로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 존재
- 신규기업 유치나 단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부족

⇒ 지원 강화,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마련 필요

## 2. 주요 내용

### ① 단지 확대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할 소부장 거점 확대

- (추가지정) 10개 단지 추가지정을 통해 20개 소부장 거점 조성(~'30년)
  - \* 3기 지정 일정: ('25년) 계획수립 → ('26년) 사업공고 및 선정 → ('27년) 사업추진
  - 1기 단지 사업 종료(~'26년)에 따라 연장 제도 도입(법 개정) 추진
- (고도화) 다수 기반구축 사업\*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계·집적
  - \* 특화단지 후속 기반구축사업을 신설, 산업혁신기반구축 內 고도화사업 기획 등
  - 기회발전특구, 첨단 특화단지 등 他특구와 협력 강화\*
  - \* 동일·연관 업종 특구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 R&D프로그램 지원 등

### ② 투자 유치 '소부장 상생 패키지' 협약으로 기업유치 혁신모델 구축

- 공장신설에 대해 중앙·지방정부, 앵커기업, 지원단이 원팀 지원

구 분	지 원 내 용	비 고	
기업발굴	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생태계 핵심기업 발굴	중앙·지방정부, 앵커기업	
패 키 지 협 약	판로	특화단지 생태계 기업의 거래(수요·공급)의향	앵커기업
	R&D	신규생산품목 관련 수요-공급기업 R&D	중앙정부
	규제	화평법·화관법 패스트트랙, 청년의무교육 완화 등	중앙·지방정부
	입지	조성원가 이하 분양,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	중앙·지방정부, 사업시행사
	특화	이자 이차보전, 주거·문화·복지 지원 등	지방정부
	금융	자본 투자, 저리 대출, 최대 보조금	중앙·지방정부, 금융기관
	인력	공장설립전 인력채용, 재직자 교육, 특화교육 등	중앙·지방정부
밀착관리	지방정부 담당관 지정, 전 과정 밀착관리	중앙·지방정부	

### ③ 경쟁력 강화 AI·R&D 융합거점 조성으로 글로벌 소부장 허브 도약

- **(AI기반구축)** AI트윈랩\* 도입으로 소부장 디지털 전환(DX) 선도
  - \* AI기반 실시간 테스트 최적화, 데이터 수집·활용 등을 도입한 디지털트윈 작업공간
  - AI기반 가상공간에서 신뢰성·양산 사전 검증\*, 획기적 비용 절감
    - \* 양산성능평가 사업에 가상+실물 융합 시험평가 트랙 신설('26년)
- **(글로벌화)**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도약
  - 37개 공공연구원의 특화단지 사무소 개설 추진('26년 기획)
- **(지원체계)** 지역 소부장 정책의 구심점으로 특화단지 지원단 발족
  - 법 개정 후 '26년 1~2개 선도 사업자 지정 검토

### ④ 제도 개선 특화단지 제도적 완결성 및 지역 주도 운영체계 확립

- **(법·제도)** 특화단지 개념·정의 명확화, 소부장법 개정 추진
  - \* 소부장법 내 정의, 유효기간, 변경절차, 계획수립, 지원조직 등 신설
- **(지정절차)**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예비검토 도입, 평가지표 공개
  - \*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순회설명회에서 예비검토 지원
- **(지역주도)** 지역 주도 발전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지원 실현

	현행		개선안
계획수립 주체	중앙정부	⇒	지자체
중앙정부 지원	맞춤형 지원방안 수립	⇒	지원 메뉴판 제공
지방정부 지원	수동적 지원	⇒	지원계획 수립, 매칭비율 확대
연간 계획수립	없음	⇒	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평가 제도	우수단지 선정('24년~)	⇒	우수단지 선정, 연장 평가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및 필요성 .....	1
II.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와 한계 .....	2
III. 비전 및 목표 .....	6
IV. 추진 전략 .....	7

## I. 추진 배경

### ◇ 美관세전쟁, 中수출통제 등으로 각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

- 美관세조치로 대변되는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
  - \* 美자국우선주의(AMERICAN FIRST), 中홍색공급망(중국 중심의 소부장 공급망)
- 세계 각국은 안정적 공급망확보를 위해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 소부장 산업에 대해 클러스터 전략 등 대규모 국가적 지원 추진 中
  - \* 예) 日정부는 '21년 TSMC에 총 투자금 2.9조엔 중 1.2조엔의 지원을 통해 공장 유치, 이와 연계한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(100여개사 4.7조엔 투자유치)

### ◇ 인공지능(AI) 등 산업 대전환에 따른 클러스터 전략 중요성 강조

- 인공지능(AI), 휴머노이드 등 급변\*하는 산업 환경에서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
  - \* '34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자동차의 10배가 넘는 60조불에 이를 것(모건스탠리, '25.2월)
- 특히,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산업은 클러스터 내 기업 간 협력과 공동 투자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전략 필요
  - \* 첨단산업일수록 다른 기업과의 공동기술 및 연구협력의 빈도가 중요(산업연)

### ◇ 신규 특화단지 지정 등 소부장 클러스터의 확대·고도화 요구

-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과에 따라 업종 및 지역 확대 요구\*
  - \* 우주항공, 방산, 수소 등 소부장 신규 편입('24.4월) 분야 및 미선정 지역 중심으로 요구 확산
- 단지 경쟁력 강화, 법·제도적 완결성 확보\* 등 고도화 요구도 지속
  - \* 특화단지·앵커기업 정의, 지정·해지 절차 명확화, 발전계획 수립, 지원단 운영 등

⇒ 소부장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, 공급망 안정의 근간  
특화단지 확대·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대전환에 적극 대응

## II.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와 한계

◆ 최초 지정('21년) 후 5년 차로 11조 기업 투자, 15개 핵심기술 확보, 8천여명 추가 고용 등 경제적·산업적·지역적 성과 발생

### 1 특화단지 현황

◇ 소부장 클러스터화 촉진을 위해 21년부터 총 10개의 단지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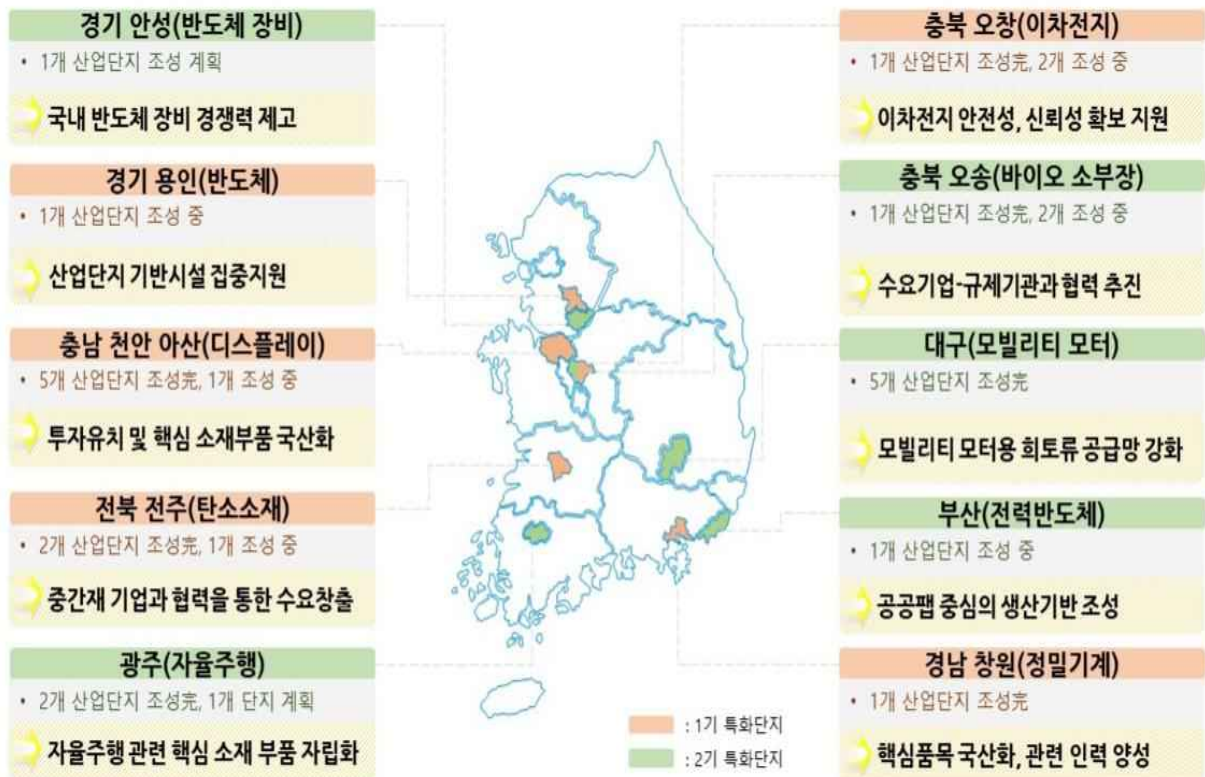
○ '21년, '23년 두 차례에 걸쳐 10개 소부장 특화단지\* 지정 → 소부장 자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 인프라 확충 중

\* 1기 : 반도체(용인), 이차전지(청주), 디스플레이(천안), 정밀기계(창원), 탄소소재(전주)

\*\* 2기 : 반도체장비(안성), 전력반도체(부산), 바이오소부장(오송), 모빌리티모터(대구), 자율주행(광주)

○ 단지별 특성·업종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R&D, 규제 특례, 인력 양성 등 단지별 맞춤 지원방안\* 마련('21.5월, '24.4월)

\* R&D, 규제 특례, 인력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 8,000억 규모 지원방안 마련



## 2 특화단지 주요 성과

### ◇ [경제] 1기 특화단지 지정('21년) 이후 총 11조 민간투자 집행

- (투자) 폭발적 성장을 경험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, 반도체 등 총 11조 민간투자 집행
  - \* 기업 투자액('20→'24, 조원) : (이차전지) 4.9, (디스플레이) 2.7 (반도체) 2
- (수출) 단지 지정 이후 1기 특화단지의 수출액은 42% 상승하였으며, 정밀기계, 탄소소재 특화단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
  - \* 수출액 증가('20→'24, 억불) : (기계) 103.9→184.3 (77%↑), (이차전지) 85.5→90.0 (5%↑), (디스플레이) 15.8→16.0 (2%↑), (탄소소재) 0.5→1.8 (125%)

### ◇ [산업] 소부장 자립,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5개 핵심기술 확보 中

- (기술 확보) 핵심전략기술 8건, 공급망안정품목 7건 확보 中

< 예시: 반도체 원자층 증착 장비 >

- 반도체 원자층 증착 장비\*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증착에 활용되는 핵심 장비로 반도체 소자의 고밀도화, 저전력화를 가능케하나 국산 공급은 전무('21년)
  - \* 시장규모(억달러, IMARC) : ('24년) 75 → ('33년) 242 (연평균 13.9%)
- 특화단지 내 수요-공급기업과 협력 성과로 기술개발 완료, '25년 현재 국내시장의 40%를 점유하고 있으며 해외기업과 기술격차도 1년 이내로 축소

- (생산기반)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 공장(~'27년, 청주), 8인치 전력 반도체 생산공장(~'26년, 부산) 등 생산 인프라도 확충 추진

### ◇ [지역] 입주기업 713개사 증가, 8천명 추가고용(1기 기준)

- (기업증가) 주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, 생산확대, R&D 등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특화단지 산단에서 713개 입주기업 증가
  - \* 기업증가('20→'24, 개사) : (기계) 476, (디스플레이) 200, (탄소소재) 35, (이차전지) 2
- (고용) 탄소소재(125%↑) 등 전 업종에 걸쳐 대규모 고용 증가
  - \* 고용 증가('20→'24, 명) : (이차전지) 3,342 (디스플레이) 3,018, (탄소소재) 932

### 3 특화단지 한계

#### ◇ 단기적 사업 중심 접근으로 중장기적 생태계 조성에 한계

- 특화단지의 조성이 단기적 관점에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, 단지별 중장기적 발전전략\*이 부재

\* 중앙정부 중심의 맞춤형 지원방안만 수립, 단지별 발전전략 미수립

- 개별 사업 종료시 특화단지도 실질적 종료 ⇒ 특화단지 지속성\*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기업의 추가투자 등 생태계 조성에 한계

\*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후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나 모든사업은 최대 5년간 지원

#### ◇ 신규기업·연구기능 유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 부족

- 특화단지 주요 지원제도가 기존 입주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, 신규 기업유치나 연구소 신설에 대한 프로그램\* 부족

\* 현재 기업유치 업무는 지방정부 투자유치과에서 전담하여 타 산단과 차별적 혜택 부족

- 또한, 단지 내 다수 기업이 연구개발 기능 없이 단순 생산거점으로 활용 중으로 지식의 축적·활용·유통이 되는 클러스터 효과 미비

#### ◇ 단지 내·외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·구심체 부족

- 입주기업 간 또는 특구 간 연계·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구심체 부족

\* 지역별로 추진단이 존재하지만, 별도 조직·예산이 없어 적극적 협력 창출에 한계

- 중앙·지방정부에서 다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, 단지 내 추진체계가 각 사업별로 상이하여 지원 사업간 연계성 부족

#### ◇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

- 중앙정부에서 지원방안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다 보니, 단지 소관 지방정부의 특화 서비스 및 자체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

- R&D, 인력양성 등 국비 사업에 관할 지방정부 역할이 제한적

◇ “언제·어떻게 선정할지 사전에 알려주세요” (특화단지 희망 지자체)

- (공고시점) 특화단지 선정 공고를 언제 할지 최소 6개월 전 사전 공지 필요
- (선정기준) 공고시점에 어떻게 평가할지 상세 평가 기준 공개 필요
- (가이드라인) 특정 산업·지역에 대한 우대 요건, 컨설팅 등 가이드라인 필요

◇ “지원이 종료되면 특화단지도 해제되나요?” (1기 특화단지 지자체)

- (제도운영) 지원사업 종료(5년) 후 해제·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 요청
- (후속지원) 초기 지원 외 후속 및 상시·수시 지원프로그램 마련 필요
- (증장기계획) 특화단지 내 기업들에게 증장기 특화단지 로드맵 제시 필요

◇ “생산기지를 넘어 R&D 혁신거점으로 변모 필요” (전문가)

- (기업유치) 벨류체인 완성 측면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포함한 기업유치 필요
- (기업성장) 외부 기업 유치 외 내부 보육 및 지원을 통한 생태계 성장 필요
- (경쟁력강화) AI(인공지능) 기술을 활용한 특화단지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

◇ “R&D 참여기업 외 중소기업은 혜택이 없어요” (특화단지 소기업)

- (멤버십) 다수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특화단지 기업 전용 멤버십 필요
- (기술지원) 자체R&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기술컨설팅·공동R&D 필요
- (종합창구) 단지 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상설 소통 창구 요청

◇ “지자체가 특화단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싶어요” (특화단지 지자체)

- (계획수립)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메뉴판식 지원 제공 필요
- (사업비매칭) R&D, 인력양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 가능토록 매칭 필요
- (전담조직) 지역 내 소부장 정책 기획 및 특화단지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

◇ “국내 다수 클러스터 존재, 클러스터 간 협업 필요” (전문가)

- (지원연계) 타 특구와 연계·협력을 통해 특화단지에 세제·인프라 등 지원 필요
- (업종별연계) 업종 단위 특구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벨류체인 완성 필요

### Ⅲ. 비전 및 목표

비전

진짜 성장의 든든한 경쟁력, 자립적 소부장 생태계 구축

목표

기업투자와 핵심기술 생산기지로써 소부장 특화단지 확대·고도화

<b>①</b> 특화단지 20개 육성(~'30년)	<b>②</b> 기업 투자 30조 유치(~'30년)	<b>③</b> 소부장 핵심기술 40개 확보(~'30년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추진  
전략

#### ①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할 소부장 거점 확대

- (단지확대) 10개 단지 추가지정을 통해 20개 소부장 거점 조성(~'30년)
- (고도화) 지역산업을 이끄는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
- (연대·협력) 단지 내 협력을 기반으로 특구 간 상생협력 도모

#### ② '소부장 상생 패키지' 협약으로 기업유치 혁신모델 구축

- (기업유치) 생태계 기업유치를 위해 판로·R&D·규제 등 패키지 지원
- (금융지원)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(투자, 용자, 보증, 보조금) 지원 강화
- (인력공급) 인력 미스매칭 해소,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경쟁력 제고

#### ③ AI·R&D 융합거점 조성으로 글로벌 소부장 허브 도약

- (AI기반구축) AI트윈랩 도입으로 소부장 디지털 전환(DX) 선도
- (글로벌화)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도약
- (지원체계) 지역 소부장 정책의 구심점으로 특화단지 지원단 발족

#### ④ 특화단지 제도적 완결성 및 지역 주도 운영체계 확립

- (법·제도) 특화단지 개념·정의 명확화, 소부장법 개정 추진
- (지정절차)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예비검토 도입, 평가지표 공개
- (계획수립) 지역 주도 발전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지원 실현

## IV. 추진 전략

### 1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할 소부장 거점 확대

- ◇ 점(Point) : 신규 단지를 추가하고 인프라를 집적하여 산업거점화
- ◇ 선(Line) : 거점 간 데이터, 기술, 연구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
- ◇ 면(Plane) : 국가 단위의 소부장 산업생태계 조성

### (단지확대) 10개 단지 추가지정을 통해 20개 소부장 거점 조성(~'30년)

#### □ (신규 단지) '26년 3기 특화단지 선정\*을 통해 소부장 거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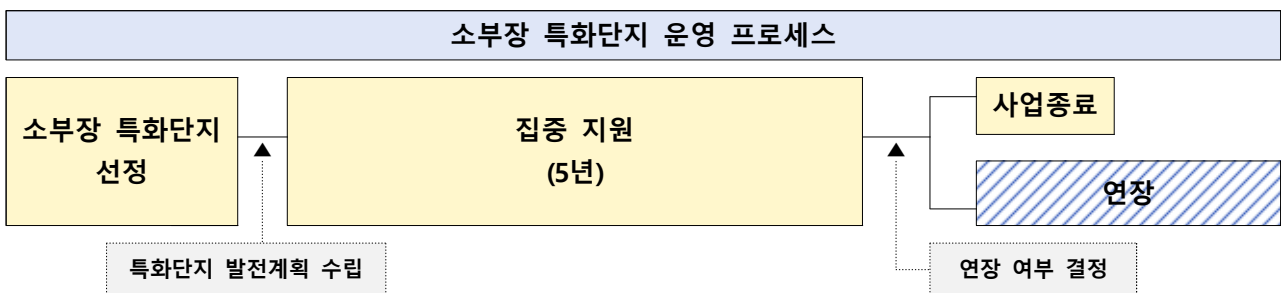
\* ①소부장 집적도, ② 연구혁신 기능, ③핵심품목 생산 등을 고려하여 지정

- 방산, 화학 등 특화단지 미지정 업종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되, 既지정 분야·지역도 차별성, 연계성을 검토하여 지정 가능
- 신규 조성 중인 산단을 포함할 경우 지원 필요시점, 생태계 조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승인 이후 단계를 우선 검토

\* 산단 주요 조성 절차 : 사업시행자 선정 → 계획 수립 → **계획승인** → 토지보상 → 조성공사  
\* 계획승인 전 단계의 산단 후보지 신청시 농림부, 기후부,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必

☞ 3기 지정 일정: ('25년) 계획수립 → ('26년) 사업공고 및 선정 → ('27년) 사업추진

#### □ (기존 단지) 1기 단지 사업 종료(~'26년)에 따라 연장 제도 도입(소특법 개정)



# 자동차 「부품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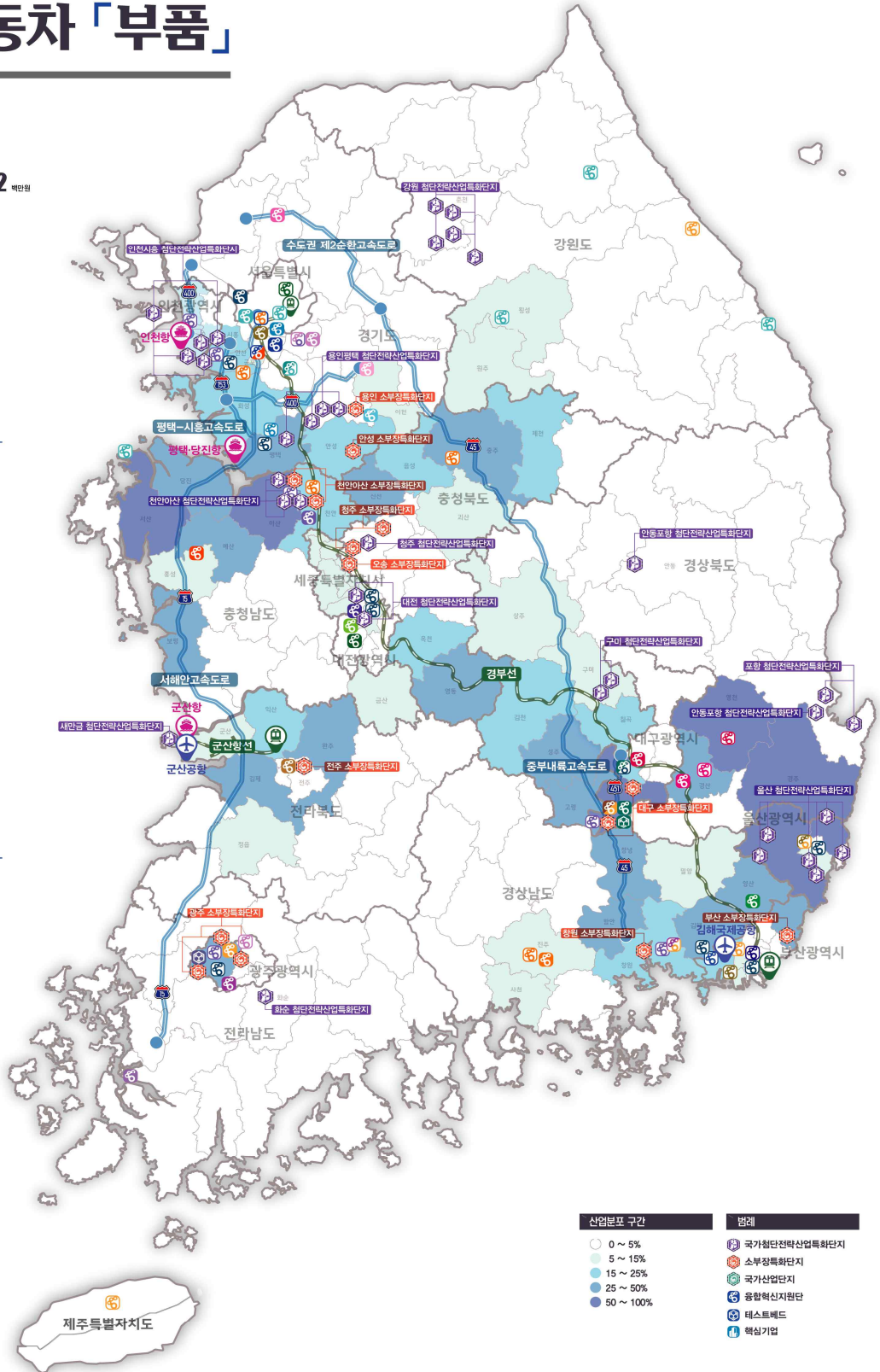
업체수 **13,841** 개사  
 생산액 **137,459,162** 백만원  
 수출액 **20,520** 백만원  
 수출액 **8,492** 백만원  
 종사자수 **267,149** 명

융합혁신지원단

- ① FIT시형연구원(10)
- ② KATRI시형연구원(2)
- ③ KOTRI시형연구원(2)
- ④ 고등기술연구원
- ⑤ 대구기계부품연구원(4)
- 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
- ⑦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9)
- ⑧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2)
- ⑨ 한국과학기술원
- ⑩ 한국기계연구원(2)
- ⑪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2)
- ⑫ 한국산업기술시험원(5)
- ⑬ 한국생산기술연구원(6)
- ⑭ 한국산업개발연구원(2)
- ⑮ 한국산업기계융합연구원(2)
- ⑯ 한국산업기계연구원
- ⑰ 한국세라믹기술원
- ⑱ 한국소재융합연구원
- ⑲ 한국원자력연구원
- ⑳ 한국자동차연구원(9)
- ㉑ 한국재료연구원
- ㉒ 한국전기연구원(2)
- ㉓ 한국전자기술연구원(3)
- ㉔ 한국전자통신연구원
- 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3)

테스트베드

- 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
- ② 대구기계부품연구원



산업분포 구간	범례
0 ~ 5%	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
5 ~ 15%	② 소부장특화단지
15 ~ 25%	③ 국가산업단지
25 ~ 50%	④ 융합혁신지원단
50 ~ 100%	⑤ 테스트베드
	⑥ 핵심기업

## [고도화] 지역산업을 이끄는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

### □ (소부장허브) 다수 기반구축 사업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계·집적\*

\* 기존에는 구축기관 편의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도 분절적 구축, 기업은 분석, 공정, 평가 등 단계별 다수 기관 방문·협의

### ○ 특화단지 후속 기반구축사업을 신설하고 他인프라 사업 간 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

\* 산업혁신기반구축: 既구축 인프라 고도화사업 기획('26년), 스마트특성화 벨류업: 로드맵 작성시 물리적 집적화 계획 포함, 소부장 특화단지 연계성 강화('26년 기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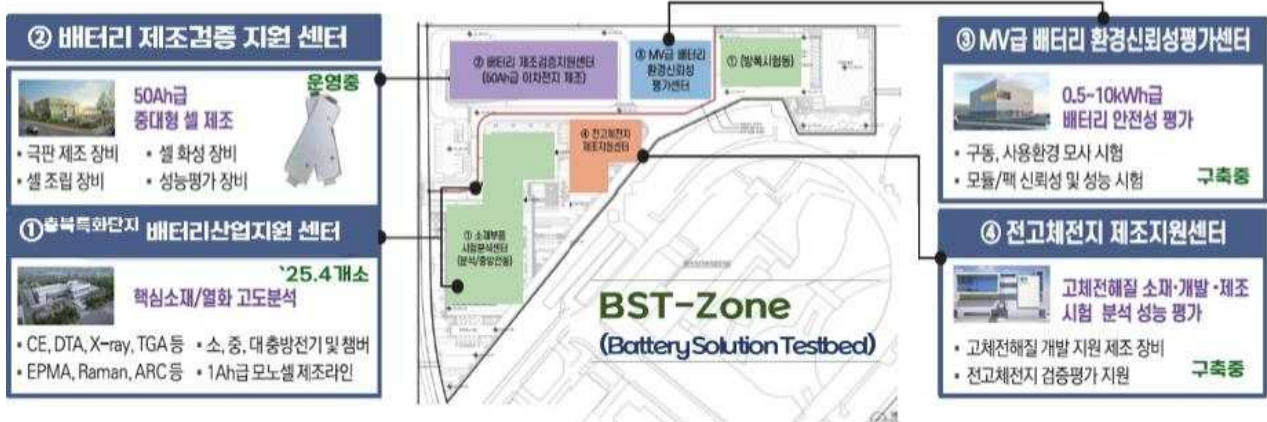
### ○ 단순한 물리적 집적을 넘어 지원기관 간 서비스 결합 추진

### □ (로드맵) 실제 생산라인과 유사 환경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동기획

### ○ 양산검증, 협력 연구개발, 성능평가, 기업지원, 특화 인력 교육 사업 등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단지별 로드맵 수립

<우수사례: 충북 BST-ZONE(Battery Solution Testbed-ZONE) >

-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를 한 지역 내에 집적함으로써 소재-부품 분석, 배터리 셀 제조, 성능평가 등 전주기 R&D·사업화 원스톱 지원
- R&D기관(한국전자기술연구원), 시험평가기관(충북TP)이 위치하여,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R&D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



\* BST존 내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지속 확충 중

## [연대·협력] 단지 內 협력을 기반으로 특구 간 상생협력 도모

### □ (단지 內 협력)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한 단지별 멤버십 프로그램 설계

\* 멤버십제도 안착을 위한 특화단지 기업 및 예비기업 인증 제도 마련(지원센터, '25년~)

#### <멤버십 프로그램(안)>

<b>기술확보</b>	<b>컨설팅</b> ▶ 지역사무소 개선을 통한 수시 기술 애로 컨설팅 ▶ 단기 해결형 R&D 지원	+	<b>기술개발</b> ▶ 특화단지 전용 R&D 지원 ▶ 협력모델 특화단지형 신설, 투자연계형R&D 우대 지원	+	<b>M&amp;A</b> ▶ 해외 소부장 기술 보유기업 M&A시 컨설팅 및 세액공제 지원
<b>생산시설 확충</b>	<b>금융</b> ▶ VC 중심의 지분 투자 ▶ 전용프로그램 신설 등 장기·저리 용자	+	<b>부지</b> ▶ 담당관 지정 + 범부처지원 협의체 중심 애로 해소 ▶ 지방투자, 유턴 최대 보조금	+	<b>신뢰성·양산</b> ▶ 新공장 제품 대상 성능·환경·수명 평가 등을 지원 ▶ 양산테스트 우대 지원
<b>근로자 지원</b>	<b>교육</b> ▶ 전략 맞춤 재직자 교육 ▶ 맞춤형 계약학과, 특성화 대학 설치 확대	+	<b>복지</b> ▶ 복지·주거·문화시설 등 단지별 정주여건 개선계획 수립 ▶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검토	+	<b>네트워킹</b> ▶ 글로벌 소부장 기술포럼, 특화단지 전체회의 등 상호교류 행사 개최

### □ (특구 간 협력) 첨단 특화단지, 기회발전특구 등 他특구와 협력 강화

#### ○ 선정단계 협력\*을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·인프라 등 지원

\* (선정단계) 산업집적 효과를 위한 상호 우대, (지원단계) 지원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

#### ○ 또한, 운영단계에서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동일·연관 업종 특구 간 협업체계 구축\* 및 공동 R&D프로그램 지원\*\*

\* 예)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통해 인프라 공동 활용, 융합 연구개발 등 연계 추진

\*\*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완결성을 위해 타 특구와 협력R&D 추진시 지원(협력모델)

#### <참고: 주요 클러스터 정책>

구 분	목 적	의결 기구	주요 지원 내용	공통 선정 지역
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	소부장 기술 자립화, 공급망 내재화	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	소부장 R&D, 테스트베드, 인력양성 등	
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	기술 초격차	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	산단기반시설 인허가 신속처리(60일) 등	용인, 충남, 충북
기회발전특구	비수도권 투자 확대	지방시대 위원회	규제 3종 특례 세제 특례 등	대구, 전북, 광주

## 2

## ‘소부장 상생 패키지’ 협약으로 기업유치 혁신모델 구축

- ◇ 기업의 특화단지 투자 의사 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,
- ① 신규 생산품목(공장신설)에 대한 수요·공급기업 공동R&D,
  - ② 공장설립·운영 자금(보조금, 용자 등), 맞춤형 인력 지원,
  - ③ 입지부터 인허가까지 설립 전과정 밀착관리(지방정부 담당관)

### (기업유치) 생태계 기업유치를 위해 판로·R&D·규제 등 패키지 지원

- (투자유치 지원) 기업의 공장설립 계획에 대해 ‘상생 패키지’ 지원
- 중앙·지방정부, 앵커기업, 지원단이 원팀으로 앵커기업과 거래관계인 국내외 수요, 공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생태계 강화 추진

#### <참고: 투자유치 상생 패키지 예시>

구분	지원 내용	비고	
기업발굴	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생태계 핵심기업 발굴	중앙·지방정부, 앵커기업	
패 키 지 협 약	판로	특화단지 생태계 기업의 거래(수요·공급)의향	앵커기업
	R&D	신규생산품목 관련 수요·공급기업 R&D	중앙정부
	규제	화평법·화관법 패스트트랙, 청년의무교육 완화 등	중앙·지방정부
	입지	조성원가 이하 분양,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	중앙·지방정부, 사업시행사
	특화	이자 이차보전, 주거·문화·복지 지원 등	지방정부
	금융	자본 투자, 저리 대출, 보조금	중앙·지방정부, 금융기관
	인력	공장설립전 인력채용, 재직자 교육, 특화교육 등	중앙·지방정부
밀착관리	지방정부 담당관 지정, 전 과정 밀착관리	중앙·지방정부	

\* 예) 앵커기업 A사와 거래관계인 B사 유치를 위해, A사는 B사의 신제품을 우선 구매하고, B사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정부가 200억 규모 협력R&D지원, 투자금 1,600억 중 400억 투자유치, 800억 무이자 대출(이자 이차보전), 150억 보조금 지원, 토지 조성원가 분양

- (투자 프로세스) 밸류체인 분석(KEIT) → 생태계 핵심기업 발굴(앵커기업) → 투자기업과 협약체결 → 투자 담당관(지방정부) 밀착지원
- 인허가\* Fast-Track(자동 인·허가제도)을 적용하여 신속 착공하고 소재 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실시간 투자애로 지원

\* 인허가 대상: 건축물 건축, 공작물 설치, 토지 형질변경, 토지 분할 등

## [금융지원]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(투자, 융자, 보증, 보조금) 지원 강화

- **(투자자금)** 자본 투자 + 저리 대출 + 보조금으로 투자자금 지원
  - (투자) 신규 공장설립, R&D에 대한 자본 투자\*(VC 등), 특화단지 전용 펀드 매칭 등을 통해 Risk 분담
    - \* 투자 희망 기업에 1:1 IR, 투자자 매칭, 재무분석, IR계획서 작성 등 지원
  - (융자·보증)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정책금융 우대금리 제공\*, 신용보증기금 전용 프로그램\*\*(보증한도↑, 보증료율↓) 지원
    - \* 금리 2.0%p 차감 적용('25.1분기 기준 1.3%), 기술혁신융자 사업('25년 1,200억, KIAT)
    - \*\*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율 최대 0.5%p ↓(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최대 0.3%p 추가↓)
  - (보조금) 유턴 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(4%p), 지자체별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\* 추가 우대
    - \* 現소부장 특화단지 2%p 우대(국비), 지자체별 추가 우대(최대 3%p, 지방비) 검토
- **(금융 카라반)** 각 특화단지로 찾아가는 금융 카라반\* 수시 개최
  - \* 지원프로그램 소개, 1:1 금융상담 지원, IR 투자 발표회 개최 등
  -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VC 주도의 밸류업컨설팅\*도 지원
    - \* 특화단지 기업의 Open Innovation, M&A 전략, 기업간 협력, 내부경영프로세스 등

## [인력공급] 인력 미스매칭 해소,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경쟁력 제고

- **(인력 매칭)** 신규 입주, 대규모 증설 등에 따른 인력 수요 적기 공급\*
  - \* 공장설립 전 사전 채용·교육을 통해 즉시 투입 (퀵스타트 프로그램 연계)
- **(전문인력 양성)** 특화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지원으로 역량 강화
  - \* 예 : (충남) 삼성디스플레이 공정라인과 유사한 공공테스트베드(QD-OLED 프린터, 전자빔-열증착시스템 등)를 활용하여 연간 60개 공급기업 교육 중

### 3

## AI · R&D 융합거점 조성으로 글로벌 소부장 허브 도약

◇ AI기반구축, 기업연구소 설립·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◇ 특화단지 정책·지원의 중심축으로 지원단 출범

### (AI기반구축) 시트원랩 도입으로 소부장 디지털 전환(DX) 선도

□ (시트원랩\*) 신규 장비 도입시\*\* 실물+가상 융합 테스트베드 우선 구축

\* AI기반 실시간 테스트 최적화, 데이터 수집·활용 등을 도입한 디지털트윈 작업공간

\*\* (1, 2기) 특화단지 고도화기반구축, (3기~) 특화단지 기반구축

○ AI기반 가상공간에서 신뢰성·양산 사전 검증, 획기적 비용 절감\*

\* LG이노텍은 AI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, 기판휨 예측 시간을 99% 단축(11일→3.6시간)

< 시트원랩 도입시 양산·신뢰성 검증 프로세스 변화 >

가상 설계



가상 검증



최적값 도출



실물장비 측정·실험

○ 양산성능평가 사업에 가상+실물 융합 시험평가 트랙 신설('26년)

<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지원 내용(안) >

단계	지원 내용	지원(안)
AI 검증	▶ 수요기업 특정 생산라인 가상 복제 ▶ AI시뮬레이션(재료/공정조건 변동 등)으로 양산 전 결함 예측 및 최적화	▶ 디지털트윈 구축비 ▶ 시뮬레이션 비용 등
물리적 검증	▶ 선평가 후 소량양산 수행 ▶ 실제 데이터와 디지털트윈 데이터 비교·보정	▶ 재료비, 제작비, 평가비 등
통합 인증	▶ 가상물리 데이터 기반 최종 양산성능평가 ▶ 국제표준(ISO,IEC등) 연계 인증서 발급	▶ 인증비용 ▶ 글로벌 협력 컨설팅

□ (ACE\* 장비) 구축 장비의 AI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시범 도입

\* 장비 AI적합성 인증제도(AI Compatibility Equipment)

○ 장비 단위 레벨·인증을 통해 특화단지 중심의 전국 확산 도모

Level. 0	Level. 1	Level. 2	Level. 3	Level. 4	Level. 5
비적합	Data 생성	Data 수집/통신	부분 제어	자동화 제어	완전 자율화
Data 수집 기능 없음	센서 등을 통해 데이터 생성	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, 분석	장비 동작 또는 파라미터 제어	AI 알고리즘 내재화	AI를 활용한 완전 자율 운영

## **[글로벌화]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도약**

- **(연구개발 허브)** 생산공장에 연구개발 역량을 지원, 마더팩토리화\*
  - \* 기업의 핵심생산기지로, 연구개발(R&D), 공정설계, 품질관리 등 중추적 역할 담당
- 단지 내 기업연구소 설립·유치를 지원하고 공동 협력과제\* 발굴
  - \* 예: (창원) 국내 주요 수요-공급업체가 "CNC 전문기업" 합작법인 설립, 협동 연구개발
- 37개 공공연구원의 특화단지 사무소 개설('26년 시범사업 기획)을 통해 단계별 기술애로\* 해소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
  - \* 기술분석 후 공공연 보유 특허 이전, 공정개선,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단계별 지원
- **(글로벌허브)**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화
  - GP, 수출바우처 사업\* 등에 대한 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
    - \* 바이어 발굴 조사, 통번역, 해외 인증, 외국어 홍보자료 작성, 특허 지재권 대응 등
  -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지 내 센터의 국제인증\* 지원
    - \* 예: (오송) 바이오의약품 소재·부품 실증지원센터에서 글로벌 규격(FDA, EMA) 공인시험 분석

## **[지원체계] 지역 소부장 정책의 구심점으로 특화단지 지원단 발족**

- **(지원단 출범)** 지역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한 특화단지 지원단 출범
  - 소부장 특화단지와 수요·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정책 지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부터 장비운영까지 포함하는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
  - 유무형의 자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지정
    - \* (기존 추진단) 비상설 연합체, 사업 종료 후 개별 기관으로 자산 귀속 → (개선) 상설 전문조직, 지자체·기업 중심의 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 자산 축적
- **(시범사업)** 법 개정 후 '26년 1~2개 선도 사업자 지정 검토

**4**

**특화단지 제도적 완결성 및 지역 주도 운영체계 확립**

- ◇ 소부장법 개정,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 보완
- ◇ 선정단계에서 지자체 부담은 낮추고 집행단계에서 책임 강화

**(법·제도) 특화단지 개념·정의 명확화, 소부장법 개정 추진**

- **(개정 방향)**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 - 앵커(중핵)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지정하여 재정·금융 지원 및 규제특례\* 적용 추진
    - \* 산업집적법 상 처분제한, 임대사업 관련 특례, 임대산단 우선 입주 특례 등
  - 단지별 발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단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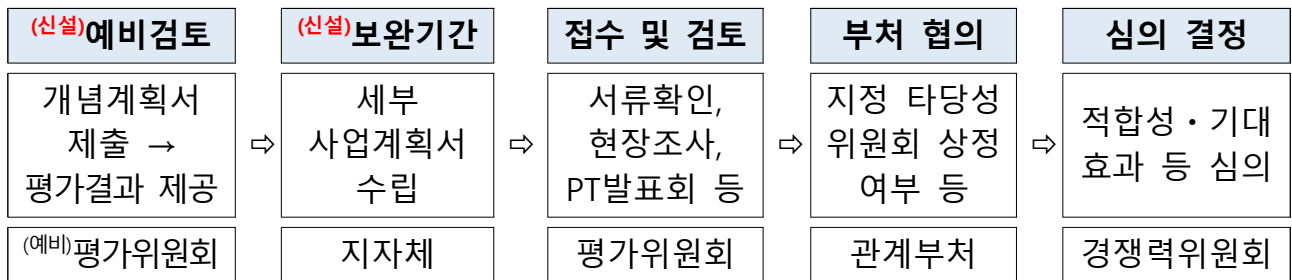
**<참고: 소부장법 개정 방향>**

구 분	기 존	개 선 방 향
정의	특화단지 정의X	법적 정의를 제정하여 특화단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(제2조)
	앵커기업 정의X	앵커(중핵)기업 정의를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(제2조, 제16조)
지정시 협의	관계기관 협의 조항 (제45조②)	경쟁력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강화 (제8조, 제45조)
유효기간	유효기간 X (각 사업별 지원기간)	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 지원근거 마련 (제45조, 제46조)
변경절차	변경절차 X	특화단지 지정 면적, 위치 등 변경근거 마련 (제46조)
계획수립	중앙부처 육성시책	단지별 발전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(제47조의2)
지원조직	지원조직 X	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의 지정·운영 근거 마련(제48조의2)

- **(하위법령 제정)**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, 시행규칙\* 신설
  - \* 특화단지 지정요건·절차, 입지변경·확대, 앵커기업 승인·지원, 발전계획·시행계획 등

## [지정절차]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예비검토 도입, 평가지표 공개

- **(2단계 평가)** 컨설팅(예비검토)과 본심사를 분리하여 지자체 부담 경감
  - 예비검토 제도 도입\*을 통해 지자체에 검토 결과 및 보완 기간 제공
    - \*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순회설명회에서 예비검토 지원
  - 본심사는 예비검토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선정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완·컨설팅보다 심사 본연의 기능에 집중(기간 단축)



- **(평가지표)**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 등 평가 (시행령§67)
  - 7대 분야 10개의 既지정된 단지가 존재함에 따라, 기존 단지와 차별성·연계성,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
  -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확정, 대외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
    - \* (현행)평가위원회에서 결정, 비공개 → (개선)공모 전 결정, 대외 공개 (소부장넷)

### < 주요 지정 요건(안) >

구 분	세부 내용
①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 (30)	소부장 집적도, 연구혁신 기능, <b>(핵심)핵심기술에 대한 자립 및 생산기반 마련 계획</b> , 소부장 생태계 강화 계획
② 기반시설 확보 (20)	기반시설 조성, 정주 여건 현황 및 계획
③ 지역주요산업과 소부장 산업간 연계성 (20)	<b>(핵심)입주(예정)기업의 시설 투자 및 고용 계획</b> , 소부장 산업연계 방안, <b>(신규)타 단지와의 차별성·연계성</b>
④ 전문인력 확보 (15)	전문인력 등 확보 및 활용·육성 방안, 지역소재 연구소, 대학, 공공기관 등 연계 방안
⑤ 지속발전 가능성 (15)	지자체의 특화단지 지원 프로그램, 입주기업 부담 완화 프로그램, <b>(신규)지역균형발전</b>

## [계획수립] 지역 주도 발전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지원 실현

- **(원칙)** 계획수립·운영 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①가이드라인 제시, ②지원 메뉴판 제공, ③사후 평가·피드백에 집중

	현행		개선안
계획수립 주체	중앙정부	⇒	지자체
중앙정부 지원	맞춤형 지원방안 수립	⇒	지원 메뉴판 제공
지방정부 지원	수동적 지원	⇒	지원계획 수립, 매칭비율 확대
연간 계획수립	없음	⇒	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평가 제도	우수단지 선정('24년~)	⇒	우수단지 선정, 연장 평가

- **(발전계획 수립)** 산업,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(신규·연장시)

- ① 지역 산업 육성계획, 단지별 여건, 기업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화단지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제시
- ② 소부장 생태계를 견인할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, 단지 내외 기업·기관과 협력 방안 제시
- ③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제시하고, 공장설립 및 후속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방안 제시
- ④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메뉴판 지원(R&D, 교육, 금융 등)을 비롯하여 정주여건 개선, 보조금, 인프라 등 지역별 특화지원 제시
- ⑤ 특화단지 육성을 지원하고,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 마련

- **(실행력 강화)**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+ 반기별 진도 점검 추진

- 성과사례 발굴·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우수단지 홍보 및 추진단 사기진작 도모

## 참고

## 지원 메뉴판(안)

### □ 기업투자 유치 지원

메뉴판	세부 내용	비고
기업발굴 (벨류체인분석)	· PD, 전문가 등을 활용한 특화단지 벨류체인 분석(KEIT)	· 투자유치 1:1 상담회시 산업부 및 유관기관 참석지원
투자유치 (협력모델)	· 기업의 특화단지 내 공장신설을 전제로 판로, R&D, 입지, 인력, 자금 등 패키지 지원 · 기업은 신규 생산품목 벨류체인상 중요성 확인(KEIT), 지투보조금 대상(산단공), 신규 생산품목에 대한 소재, 부품 국산화 계획 수립 필요	· 최대 국비 200억 지원(R&D, 건) · 규제, 금융, 인력 등 협력모델 메뉴판 추가 활용 · 지방비 매칭 30% 이상 필수(애로 해소를 위한 입지, 금융 등 활용 가능) ·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필수
보조금 우대	·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가산(4%p), 지투보조금 지원비율 가산(2%p)	· 지투보조금 추가 우대 희망시 조례개정을 통한 추가 우대 가능
금융지원	· 특화단지 전용펀드 우선 투자 · 금융카라반(1:1 상담회 등) 개최 지원 · 특화단지 기업 확인서(투자예정 포함) 발급(KIAT)을 통한 우대 지원	· 펀드 운용사: 케이엔투자파트너스 · 현재 우대대상 금융기관: KIAT(정책금융), 신보, 중진공
임대료 감면	· 국유·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	· (국유재산)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· (공유재산) 지방정부 조례로 결정
초기인력	· 퀵스타트 프로그램(공장설립 전 사전 채용·교육) 우대	· 교육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요
전문인력	· 재직자 맞춤형 실습 교육지원	· 연간 3억(국비) 한도
규제특례	·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시 우선심의	·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48조
애로해소	· 범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활용	· 일상 애로는 지원센터(KIAT)에서 관리

□ 연구개발, 글로벌 허브로 도약

메뉴판	세부 내용	비고
연구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초 지정시 1회 단지 내 기업간 생태계 구성형 연구개발 지원</li> <li>· 이후, 투자유치, 단기간 협력(대규모 R&amp;D), 기술지원(소규모R&amp;D)을 통해 연구개발 허브로 도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업 부설 연구소가 특화단지에 위치하거나 설립·이전계획 필요</li> <li>· 국비 최대 200억 지원, 지방비 30% 이상 매칭必</li> </ul>
단기간협력 (협력모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주요 특구와 협력과제 발굴시 지원</li> <li>· 과제기획 시 협업체계(품목 얼라이언스)를 구축하여 인프라 공동 활용, 융합 연구개발 기획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비 최대 200억 지원, 지방비 매칭 의무는 없으나, 기획·집행·관리 단계에서 소관 지방정부 참여 필수</li> </ul>
기술지원 (지역사무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7개 공공연구원(융합혁신지원단)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사무소 개설</li> <li>· 현장 중심의 기술애로 해결, 단기 기술지원 등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규모R&amp;D(2억), 단기 기술애로 해소는 국비 지원</li> <li>· 지역사무소 운영비용, 특화 프로그램 추진 비용은 지방비 매칭</li> </ul>
거점화 (기반구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초 지정시 기반구축 지원 (구축시 시트원랩 우선 검토)</li> <li>· 후속 기반구축 지원, 他인프라 사업 간 연계·우대 등을 통해 소부장 거점화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뢰성 기관 포함 및 우대(지원단)</li> <li>· 소부장기반구축 최대 국비 100 억원(건), 지방비 30% 이상 필수</li> </ul>
신뢰성·양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뢰성 향상 바우처 지원</li> <li>· 수요-공급기업 간 연계를 통해 개발 완료된 제품을 실제 양산라인에서 평가하여, 성능검증 및 개선을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품의 성능, 환경, 수명평가 및 고장분석, 시뮬레이션SW 활용 등에 대해 최대 1.5억 지원</li> <li>· 양산 성능 검증을 위한 재료비 제작비 등 최대 5억원 지원</li> </ul>
글로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부장 기업 - 해외 수요기업간 매칭 지원(GP사업), 수출바우처 사업 등 글로벌화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바이어 발굴 조사, 통번역, 해외 인증, 외국어 홍보자료 작성, 특허 지재산 대응 등</li> </ul>
M&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화단지와 관련된 소부장 핵심기술, 공급망 품목 인수시 최우대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수금액의 5%(대), 7%(중견), 10%(중소) 세제 지원</li> <li>· 자산종합평가 등 최대 1.5억 지원</li> </ul>